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16. 4. 6.

금 융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며칠전, 허위 장애인단을 받아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타낸 전·현직 육군 특전사 부대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전문적인 보험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보다 552억(9.2%↑) 늘어난 수치입니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 : (13년) 5,189억원 → (14년) 5,997억원 → (15년) 6,549억원

또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가족·지인을 상대로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조직화·흉포화 되는 보험사기가 도덕적 불감증 심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꿈을 꺾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손쉽게 돈버는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의의

정부와 국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3월 3일,
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말 공포되었습니다.

동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 등을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보험사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 → 수사 → 처벌 → 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공조·협조 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조체계 아래에서
첨단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상시 감시·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험범죄 적발·처벌 실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 |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근절

이와 함께, 우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보험사기 억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동 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균형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 당부 말씀

오늘 간담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검찰·경찰 및 보험업계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기관 및 업계에서
지금까지 보험사기 방지·억제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해 오신 점을 치하드립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참석하신 관계기관·업계 관계자 분들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